

‘크레딧 리스크’ 남의 일... 신용등급 오른 ‘1%의 보석기업’

금호석화·한화·이랜드에 삼성전자까지... ‘군계일학’

9월 말 신용등급 상승기업 20곳
구조조정·사업구조 변화 한 몫

‘불황·절벽...’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에 대한 진단은 그야말로 암울했다. 각 국가가 저성장의 칼바람에 꺼져가는 경제의 불쏘시개로 꺼내든 것은 보호무역과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한국경제에는 큰 장애물이었다. 2%대 저성장에 갇힌 한국경제는 소위 ‘늪’에 비유되곤 한다.

덕분에 현대차그룹은 20년 만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경제 상황과 기업환경이 더 나빠진다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시장에서는 한 겨울을 버텨내고 환골탈태한 기업에 주목한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를 일찌감치 탈바꿈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기업들이다. 신용등급이 이를 가장 잘 말해 준다.

◆반도체의 힘, 삼성전자 ‘군계일학’

6일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업체에 따르면 3분기 현재 긍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19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월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내 홍보관에 있는 반도체 홍보 전시물. /연합뉴스

학업종이 4개 기업(여천NCC·㈜한화·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건설업종 3개(GS건설·대영건설·한라), 전자업종 2개(SK실트론·오성첨단소재) 등이다.

연초에 비해 9월 말 현재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20곳이다.

그룹별로는 화학업종 비중이 큰 한화그룹이 가장 많은 4개 계열사(한화케미칼·한화중합화학·한화토탈·한화손해보험)의 등급이 상승했다.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이랜드그룹도 이랜드리테일, 이랜드

월드 등 2개 계열사의 단기등급이 상향됐다. OCI그룹은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개선 추세가 반영돼 OCI와 군장에너지의 등급이 상승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반도체다. 먼저 리딩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7조원을 돌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갤럭시노트9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반도체가 견인한 결과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월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가 삼성전자

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지난 2005년 7월 이후 13년 만이다.

글로벌리 큐엔 무디스 선임연구원은 “주요 사업부문에서 기술력과 시장지위 측면의 리더십 강화에 따른 영업 안정성 개선과 탄탄한 현금흐름, 대규모 설비투자, 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대한 매우 우수한 완충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등급을 부여하는 한국 주요 산업의 비금융 기업들이 세계 경제 성장과 낮은 유가를 토대로 올해 양호한 영업실적을 거둘 것”이라며 업종별로는 테크놀로지(기술)와 철강, 정유, 화학이 양호한 업황을 유지하고, 자동차와 유통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무디스는 진단했다.

◆위기때 더 빛난다, 투자가치 매력적

이들 기업이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곳곳에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중국의 경기하강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도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들은 벌써부터 발을 빼고 있다. 막

을게 없어서다. 연초 이후 10월 말 현재 국내 크레딧의 평균 투자 성과는 3% 내외에 불과하다. 지난해 7-8월 45%까지 치솟았던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은 365%까지 낮아졌다.

NH투자증권 한광열 연구원은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연말까지 확대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비롯해 유럽의 정치적 이슈,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좋지 않고, 한국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우려’인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할 전망이다.

투자측면에서도 신용등급은 활용 가치가 있다. 신용등급 상향은 업황개선에 따른 실적회전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차입금이 감소해 현금흐름이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증권 박태근 연구원은 “기업 펀더멘털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다”면서 “‘A’ 등급 기업은 업황 우려가 제한적인 섹터에 한해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현대중 대표이사에 한영석·가삼현 사장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단 인사

현대중공업그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계열사 사장단 및 현대중 사업본부 대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내 조선계열사와 정유 부문을 대표하는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신규 선임하는 등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세대교체 인사가 단행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6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공동 선임 사장에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과 가삼현 현대중공업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사장을 내정하는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 및 현대중공업 사업본부 대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영석 선임 사장은 충남대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설계 및 생산본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현대미포조선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부임 후 현대미포조선을 3년 연속 흑자로 이끌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그룹은 설명했다.

가삼현 선임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중공업 선박영업 본부에서 근무했다. 런던지사장, 서울 사무소장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그룹 선박해양영업대표를 맡아왔다.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에는 현대중공업 신현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신 사장은 충북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계약관리, 의장, 시운전 담당을 거쳐 군산조선소장을 지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 / 가삼현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영업본부 사장

냈고, 2016년 11월부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사업대표를 맡아왔다.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로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상균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다. 이 사장은 인하대 조선공학과를 나와 현대중공업 선박건조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현장 전문가다.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에는 강달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강 사장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생산부장, 중앙기술연구원장 등을 지낸 뒤 2014년부터 안전생산본부장을 맡아왔다.

정명립 현대엘렉트릭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중공업의 사업본부 대표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져 해양플랜트사업 대표에 박준성 전무, 엔진기계사업 대표에 이기동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해 선임됐다.

현대중공업지주 로봇사업 대표 자리는 현대중공업 서유성 전무가 맡는다.

/양성운 기자 ysw@



올해만 6번 강도... 100억원대 횡령사고...

범죄 표적된 새마을금고, 안팎으로 ‘탈탈’

경비인력 보유율 13.9% 그쳐
관리·감독 법안 국회서 ‘쿨쿨’
개별법안으로 의무사항 아냐

새마을금고가 안팎으로 털리고 있다. 보안에 취약해 강도의 표적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직원들의 비리와 횡령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자금수준에 맞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

6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국 1315개소(지역금고·직장금고 포함)로 지난 2016년(1321개소)보다 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지난해 1927만명으로 2016년 대비 0.9%(1910만명) 늘었고, 총자산은 2017년 기준 150조5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8.7%(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고 수는 감소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늘면서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올해 6번째 강도의 표적이 된 새마을금고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확인결과 전국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배치한 곳은 13.9%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직원이 1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고, 2013년 MG손보 인수 과정의 특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주사와 본점 지점별로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정밀 감독이 이뤄지지만 아무래도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않다보니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확인한 결과 새마을금고만 주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장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회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에게 중앙회

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반면 농협(농업협동조합)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권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감독이 가능한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신협(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리·감독에 대한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안은 총 6건이었지만 수정 가결된 건을 제외하곤 모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의 법안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안시스템 및 안전시설물, 청원경찰 등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개별법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새마을금고마다 보안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